

# 시민사회운동, 무엇을 바꿔야 하나

운동진영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동진영이 새 천년기를 이끌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설득력과 도덕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자기개혁없이 사회개혁 없다”는 노동운동의 고민은 다른 운동 진영에도 예외는 아니다. 운동의 자기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자기반성을 들어 보았다.

## 이재명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간사

이 글을 쓰면서 될 수 있는 한 시민운동에 관해 그 동안 수없이 언급했던 일반적 차원의 비판을 피하는 게 좋을 듯하다. 두서없는 나열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부딪치고 느끼는 문제들을 지적할 것이다. 거대담론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로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사안들이 운동의 질곡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6일 녹색연합은 후원의 밤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향해 뼈아픈 한마디를 던졌다. 자축과 성찬의 자리가 됐어야 할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백을 토해낸 것은 그만큼 위기와 자성의 목소리가 절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고백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화려함의 이면에 감춰진 시민운동의 아픔을 드러내 보자. 그 고백의 요지는 이렇다.

하나. '그들의 돌팔매질'. 시민과 시민운동가와의 괴리. 운동가들이 시민의 삶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가?

둘. '언론 해바라기'. 대안제시보다는 보여주기식 시위에 치중.

셋. '밟다 밟다. 하면서 닳는다더니...' 사회적 영향력 증가하자, 또 하나의 권력 흉내.

넷. '모자란 생활비 사랑으로 채우죠.' 간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도 보장하지 못한다.

다섯. '그늘진 가게부'. 수입의 현황을 보면 회비자립도는 낮고 프로젝트에 치중. 이

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와 사업의 선단식 확장.

여섯. '대안없는 비판'. 면책특권을 가진 것처럼 혹은 치외법권 지대인 것처럼 행동하는 활동가.

일곱. '남들에겐 철저, 자기에겐 한없이 관대.'

여덟. '시민 회원은 시민운동의 대상.' 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활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푸념.

뒤통수가 따끔해진다.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세기를 앞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성장과 발전의 시기에는 반성과 자정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속된 말로 잘나갈 때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지적되는 많은 부분은 실제 누구나 느끼고 공감하는 문제들일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은 어떤 것은 과잉에서 또 어떤것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 '크고 많다'는 것과 사회적 영향력은 동의어인가?

영향력의 확대, 즉 힘의 과시라는 측면에서 연대의 빈도와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을 위한 국민행동, 국민연대, 공동대책위 따위... 그리고 전국 몇 백개 단체들이 연대해서 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선전하고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실제 집회나 행사현장에 가보면 고작해야 50여명, 심지어 연대단체 실무자들도 참석하지 않는다. 일종의 과대포장이다. 사실은 단지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 이 연대체에는 별관계도 없을 것 같은 단체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이왕이면 많을수록 좋다는 논리다.

그러나 다다익선(多多益善) 논리의 맹점은 역으로 시민운동의 정착과정을 반추해 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과거 사회운동으로부터 탄생했고 다수 회원의 확보, 정치 캠페인에서의 지지를 통해 기반을 닦아왔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은 투명성과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대중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다수 대중의 참가와 확보를 통해 제한된 정당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정치문화적 다양성이 힘으로 연결되어 왔다. 고유하면서 집중된 사업에 투자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시민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활동위주로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모든 문제가 정치로 귀결되는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문화의 부재는 '시민운동에 쉽게 접근하는 것'(easy access to civil movement)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시민들은 자

본주의 상품 소비문화에 철저히 잠식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이들에게 대안적인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해(interest)를 충족시켜주는 조직보다는 정서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조직이 선호되고 있다. 정서적 욕구 해결을 통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시민단체는 오고 싶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 즉, 회원들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매체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대안의 시민문화, 정서공동체, 그리고 신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소수에 집중된 재정 의존도

소수에 집중된 재정 의존도는 허약한 지도력의 다른 표현이다. 재정의 허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한국 시민단체에게 시급한 과제다. 회원수의 확대를 통한 회비 수입의 증가, 후원행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서 재정 안정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비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의 재원은 프로젝트 수주와 후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소수 활동가들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후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한 단체의 재정이 일부 몇몇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이 떠나면 조직이 휘청거린다. 그만큼 붕괴의 위험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지도력의 허약함을 나타낸다. 정책 분야에 집중된 인력을 조직과 재정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인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수에게 집중된 재정 부담을 고르게 확대해야 한다. 시민운동을 안정적으로, 생명력있게 이끌어 가느냐는 얼마나 재정부담을 공동화(共同化)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몇몇 시민단체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 경우처럼 기금운영, 재단설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문제해결의 주체는 시민?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회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민주적 시민의 양성, 시민의식의 개혁, 이를 통한 운동의 저변확대와 참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시민참여를 무슨 도그마처럼 외쳐대면서도 정작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려를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가?

낮 12시 집회, 기껏해야 토요일 오후 행사...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조에서는 대중의 참여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운동방식의 새로운 유형을 모색해야 한다. 일례를 들자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람 모으기, 그리고 이들을 통한 항의 메일 보내기와 같은 것이다.

### 활동에 대한 과잉기대

시민운동단체는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주체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일반 국민, 언론, 회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민원 해결, 정치적 대변, 이해관계의 표출 등 우리사회의 정치구조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시민운동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떠안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관심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시민단체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위험 부담률이 크다. 그래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리다 보니, 성명서, 기자회견, 논평 등 이른바 여론전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쓸 수 밖에 없다. 요구수준의 과다, 인력과 시간의 문제 등이 장기계획 수립과 정책대안 마련에 투자되어야 할 노동력과 시간을 여론전에 투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된 사업풍토는 길게 볼 때 시민들을 주체로 묶어 세울 수 없고, 그들을 대상화시킨다. 무엇보다도 이런 풍토는 시민운동 조직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도록 만든다. 활동가들 역시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매달려 어렵게 시민단체 문을 두드린 사람들을 가볍게 취급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활동이 조직화로 연결되기보다는 '성과주의'로 치우치기 쉽다.

### '엘리트주의', '급진주의' - 이른바 운동권 의식

사실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운동권 모습의 실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돼 있다. 문화나 정서에서 드러나는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소외감이 없지 않다. 물론 원칙에 대한 철저한 견지와 기동성 같은 긍정적인 요소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막연하게 운동권 의식의 폐해를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

시민들의 곁으로 드러나는 특징, 즉 그들의 '존재' 자체는 평범하고 무력하고 두려움 많고 수줍고 이기적일 수 있다. 이런 대중을 이해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즐기고, 그 좌절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은 시민운동가의 당위다. 꾸준한 설득과 동의를 통해 대중들이 두려움과 거리감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낮은 자세와 눈높이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대적인 진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천적

이고 유효한 대중영향력과 이미지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희망이 대중에게 있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말이다.

### 경쟁주의를 버리자

자기단체 중심주의(이기주의) 또한 그릇된 경쟁 원리에 다름 아니다. 언론매체에 다른 단체보다 한번 더, 조금 더 크게 나와야 속된말로 '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야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단체의 활동에는 배타적이다. 이유있는 비판도 있지만, 무조건 싫다는 정서 또한 만만치 않게 팽배해 있다. 한 단체의 성장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것은 운동의 대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결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운동진영 안에 있지 않다.

### 엄성한 조직운영

대의로 버티던 시대는 갔다. 사업운영, 홍보, 재정 등 어느 것 하나 장기 전망 속에서 체계를 세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얼핏 보기에는 뭔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어찌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니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행 일정을 가져야 한다. 운동성과 더불어 사회세력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운동 단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21세기 운동발전의 전망 속에서 최소한 1년의 사업계획은 새운 가운데 낱알의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 토론문화를 바꿔보자.

거대담론에 익숙한, 아니 솔직히 말해 이를 즐기는 우리네 토론문화! 허공을 떠도는 추상화와 구체성을 상실한 화려한 말잔치! 돌아서고 나면 '그럼 우린 뭘 해야지' 라는 되물음! 실천 계획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장시간의 '토론을 위한' 토론!

실천적인 문제를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등한시하는 허위의식은 사라져야 한다. 장시간의 언어 유희를 즐기는 것이 고상하고 수준있는 토론이라는 의식이 부지불식간에 몸에 배어있는 것은 아닌 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 우리 안의 남녀 성비율

보편적 화두인 남녀평등. 정치적인 고려일 수도 있다지만, 정부조차도 공무원의 남녀 성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이제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진보와 평등을 얘기하는 운동단체에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외부

회의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참가자 중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단체 안에서도 간부 또는 전문가 가운데 여성이 몇명이나 되는지? 단순히 여성인력의 부족이나 역량을 말하기 전에 무의식 속에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되새겨 봐야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여성의 비율과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우리는 미래지향적인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또는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위안에서 흘러 지나쳤던 부분들을 지적해 봤다. 어찌보면 사소한 문제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운동의 대중적인 확산을 고민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운동가들이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다.

우리가 타인과의 만남에서 첫인상을 중시하듯 시민들 역시 자신만이 느끼는 시민운동에 대한 인상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운동의 목표가 시민들 개개인의 관심과 이해를 공격 가치의 문제로 끌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시민운동은 활동가들만의 운동이어서는 안된다.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나 '동네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훨씬 풍부한 문제의식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이제 먼 곳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운동은 하나의 이슈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가지 캠페인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목표달성 자체가 중시되면서, 제도화와 법제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 즉 참여와 유대감과 연대의식과 민주주의의 체화가 무시되고 있다. 진보에는 일반 대중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 즉 캠페인에 참가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종종 프랑스인들의 국민성을 얘기한다. 그들의 국민성이란 다름 아닌 진보와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성공한 혁명을 경험하고, 그들의 힘으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상과 내용을 사장한 채 프랑스 국민들이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우리나라의 보통 시민들은 자신에게 다친 문제를 '운동'을 통해 해결해 본 얘기가 거의 없고, 정치 혹은 시민운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 이러한 틀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시민운동에는 시민이 모일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부쉬야 할 것들을 얘기한다는 건 다가올 세

로운 시대의 전망에 비춰보아야 가능한 작업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세기를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기의 담론을 논하면서 아직도 유효한 것은 그 담론이 계급과 계층의 이해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민운동 안에서도 필요하다. 과연 전환되어야 할 것이 '자본의 논리' 나 '자본의 패러다임' 뿐일까? 우리 안에는 전환할 것이 없는가?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이름 하에 인권 평화 환경 여성 등을 도외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막고, 21세기가 인간중심적이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세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세기를 지배해온 경쟁과 대립, 억압과 저항 대신 공생과 공존, 연대와 평등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그 시작을 우리 운동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해보면 어떨까? ❖